

2020. 1.11. 경찰승진**실무 I**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1 갈등관리의 대체적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에 의한 갈등해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으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이다.
- ② 협상이란 둘 이상의 집단이 사회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해결할 목적으로 토론하는 것이다.
- ③ 중재는 절차를 제3자에게 맡기되 결과를 당사자가 통제하는 것이다.
- ④ 조정이란 공식적인 의사결정력이 없거나 혹은 제한적으로 가진 제3자가 협상이나 갈등에 개입하여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이다.

- 해설** → ① 대체적 접근이란 재판에 의한 갈등해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으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협상이란 둘 이상의 집단이 사회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해결할 목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말한다(절차와 결과를 모두 당사자가 통제하는 형태).
- ③ 중재란 당사자들이 자신의 분쟁을 중립적 제3자인 중재인에게 의뢰하여 중재인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해결 방식을 말한다(절차와 결과를 모두 제3자에게 맡기는 형태).
- ④ 조정이란 공식적인 의사결정력이 없거나 혹은 제한적으로 가진 제3자가 협상이나 갈등에 개입하여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절차는 제3자에게 맡기고 결과는 당사자가 통제하는 형태).

정답 ③**2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시보임용 및 승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경찰관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은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 ②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 ③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50퍼센트씩을 각각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
-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정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제2평정 요소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일 경우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정할 수 있다.

- 해설** → ①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 제3항
 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 제4항 제1호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근무성적 제2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정답 ④

3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해설** → ①③④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2항·제4항
 ②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

[핵심정리] 직위해제사유 및 봉급 등(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직위해제 사유	봉급	비고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봉급의 80%를 지급함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함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제3호)	봉급의 50% 지급.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를 지급함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제4호)	“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제5호)	봉급의 70% 지급. 다만, 직위 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를 지급함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제6호)	봉급의 50% 지급. 다만, 직위 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를 지급함	

※ 1. 직위해제 사유와 2. 3. 5.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면 2. 3. 5.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함

정답 ②

4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②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무원은 재직 중에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나, 퇴직 후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
- ④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

- ①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 ② 동법 제63조
- ③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동법 제60조).
- ④ 동법 제65조 제1항·제2항

정답 ③

5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상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이다.
- ② 특정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이다.
- ③ 복무감사는 피감사기관에 속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다.
- ④ 종합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다.

- 해설** → ①③④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
 ② 특정감사란 특정한 업무·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동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핵심정리] 경찰행정사무감사의 종류(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제4조 제1항)

구 분	내 용
종합감사	피감사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복무감사	피감사기관에 속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그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정답 ②

6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직권휴직과 직권면직의 사유에 대한 내용이다. 각 사유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해당 직급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① 직권면직 - ㉠㉡, 직권휴직 - ㉢㉣
- ② 직권면직 - ㉡㉢, 직권휴직 - ㉠㉣
- ③ 직권면직 - ㉠㉣, 직권휴직 - ㉡㉢
- ④ 직권면직 - ㉠㉣, 직권휴직 - ㉡㉢

- 해설** → ㉠㉣ 2 항목은 직권면직 사유이고, ㉡㉢ 2 항목은 직권휴직 사유이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핵심정리] 경찰공무원 직권휴직 및 직권면직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구 분	사유
직권휴직 사유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4.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직권면직 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직위해제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5.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

정답 ③

7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의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출석 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7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없다.

해설 →

- 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1항
- ②④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동 징계령 제12조 제3항).
- ③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 징계령 제11조 제1항).

정답 ①

8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비를 지출하기 위한 사업이나 기능에 대하여 그 사업이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명백 하게 나타내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 ②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한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③ 해당 부서의 업무능률을 측정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단위원가 계산이 곤란하고,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해설 →

-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핵심정리]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장점	단점
1.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예산편성 시 자원배분 합리화,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 3. 정부정책의 수립이 용이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가 간편하다. 4. 해당 부서의 업무능률을 측정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1. 업무측정단위의 선정이 어렵다. 2. 단위원가 계산이 곤란하다. 3.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

정답 ②

9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상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발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 ③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업무의 성질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신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동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신하여야 한다.
- ④ 기안문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8조 제4항에 따라 발의자와 보고자의 직위나 직급의 앞 또는 위에 발의자는 ⊙표시를, 보고자는 ★표시를 한다.

해설 →

- 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 ② 동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③ 동규정 제16조 제1항·제2항

④ 기안문에는 발의자와 보고자의 직위나 직급의 앞 또는 위에 발의자는 ★표시를, 보고자는 ○표시를 한다(동규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정답 ④

10 「보안업무규정」 제12조에 규정된 비밀분류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알 사람만 알게 하고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③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 ②③④ 이들은 보안업무규정 제12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① 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①

11 다음이 설명하는 차량신호등의 신호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음

- ① 황색의 등화
- ② 적색의 등화
- ③ 황색등화의 점멸
- ④ 적색등화의 점멸

해설 → 설문은 적색등화의 점멸에 관한 설명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핵심정리]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 차량신호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구분	내용
녹색의 등화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황색등화의 점멸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등화의 점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정답 ④

12 「도로교통법」 제13조에 규정된 차마의 통행방법 중 우측 통행원칙의 예외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고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 ②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③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 ④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해설 → ①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3호).

②③④ 동법 제13조 제4항

[핵심정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정답 ①

13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퍼센트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이고 2회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최초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퍼센트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 ①②③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④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퍼센트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핵심정리] 음주운전죄 및 음주측정불응죄의 법정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등)

구분	처벌	
음주운전 (제44조 제1항)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2회 이상 음주운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측정불응 (제44조 제2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148조의2 제2항)	

※ 자전거 음주운전 등은 제외한다.

정답 ④

14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범칙금 납부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 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마지막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는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④ 위 '③'의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 →

- ①②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 ③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고처분불이행자"라 한다)에게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범칙금등(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 ④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정답 ③

1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다음 위반사항 중 운전면허 별점이 가장 큰 것은?

- ①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②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 ③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④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해설 → ①③④ 이들은 벌점이 30점이고, ② 이는 벌점이 40점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3. 정치처분 개별기준).

정답 ②

16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상 긴급자동차 교통안전운전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긴급자동차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③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교통 안전교육은 2년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한다.
- ④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실시한다.

해설 → ① 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
 ②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160조 제2항 제6호).
 ③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교통 안전교육은 3년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한다(동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 제2호).
 ④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4항

정답 ③

17 운전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면허증의 반납사유가 발생하면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제2종 보통면허(자동변속기)로 5인승 수동변속기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이다.
- ③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장내기능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을 때이다.
- ④ 병무청장, 보건복지부장관, 검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 ①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면허증의 반납사유가 발생하면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② 제2종 보통면허(자동변속기)로 5인승 수동변속기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는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이 경우 면허조건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동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③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별표 24]
 ④ 병무청장,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공제조합의 이사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8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검찰은 통보의무가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18 교통사고조사시 도면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축적도를 그릴 때는 400분의 1의 축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도면작성에 있어 방향표의 위치는 용지 우측 상단이다.
- ③ 차의 사고지점과 정차지점을 표시하는 때에는, 이동지점은 점선으로, 정차지점은 실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 ④ 도면에는 작성자가 계급,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해설 → ① 교통사고조사규칙 제14조 제2항
② 도면작성에 있어 방향표의 위치는 용지 좌측 상단이다.
③ 동규칙 제14조 제7항
④ 동규칙 제14조 제8항

정답 ②

19 갭(GAP) 스키드마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운전자의 발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중에 미끄러졌다가 다시 밟는 경우에 발생한다.
- ② 급격한 제동 때 미끄러지는 불안한 느낌 때문에 운전자가 반사적으로 잠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놓고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면 다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 ③ 스키드마크를 내면서 진행하던 차량이 보행자 또는 자전거와 충돌할 경우에 많이 나타나며, 소형차량보다 대형차량에서 쉽게 발생한다.
- ④ 좀 더 빨리 정지하기 위해 운전자가 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펌프질하듯이 밟았다 떼었다 다시 밟는 경우에 발생한다.

해설 →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스키드마크를 내면서 진행하던 차량이 보행자 또는 자전거와 충돌할 경우에 많이 나타나며, 대형차량보다 소형차량에서 쉽게 발생한다.

정답 ③

20 교통사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②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좌우의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타이탄트럭이 도로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③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 ④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명함을 주고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의뢰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이송을 못하고 있는 사이 사고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

- ① 대법원 2007.10.26. 2005도8822
- ② 대법원 1990. 5.22. 90도580
- ③ 대법원 2007. 4.12. 2006도4322
- ④ 사고 운전자가 그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12. 2004도250).

정답 ④

21 교통사고처리 및 대형교통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형교통사고를 인지한 경찰관은 사고발생지가 다른 경찰서 관내인 때에는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해당 경찰서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 ②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란 사망, 도주, 중상해, 단서 12개항(「교통 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고, 합의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된 부상사고를 말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③ 대형교통사고에서 논점의 대상이 되는 주요 항목으로는 차륜흔적의 종류, 사고 당시 차량의 과속여부, 차량 결함여부, 노면 손상흔적 및 차량부품 등 비산정보의 정확한 위치 등이 있다.
- ④ 대형교통사고 현장조사 임장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장비로 줄자(50미터 이상), 클리노미터, 스프레이 페인트 및 분필 등이 있다.

해설 →

- ① 교통사고조사규칙 제4조 제5항
- ②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제6호).
- 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답 ②

22 경비경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복합기능적 활동 -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에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경계 예방 역할을 수행한다.
- ② 현상유지적 활동 - 경비활동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만, 이러한 질서유지활동은 정태적 소극적인 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 적극적인 유지이다.
- ③ 조직적 부대활동 - 경비활동은 주로 계선조직의 지휘관이 내리는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므로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지휘관이 지휘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④ 즉시적 활동 - 경비경찰은 항상 긴급을 요하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해설 →

-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 ③ 조직적 부대활동이란 경비경찰은 개인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항상 부대활동으로 훈련을 하고 근무를 하며, 경비사태 발생시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물리적인 힘으로 대처하는 것이 특징인 것을 말한다.

[핵심정리] 경비경찰의 특징

구분	내용
복합기능적 활동	경비경찰은 사전예방, 경계, 사후진압의 임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함(사태 발생 후에 진압뿐만 아니라 사태 발생 전에 경계·예방의 역할도 수행함)
현상유지적 활동	경비활동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질서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가치를 둬(소극적 질서유지활동은 정태적·소극적인 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적극적인 유지임)
즉응적(즉시적) 활동	다중범죄, 테러, 경호상 위해나 경찰작전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비경찰은 기한을 정하여 진압할 수는 없으며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조기 진압해야 함
조직적 부대활동	경비경찰은 개인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항상 부대활동으로 훈련을 하고 근무를 하며, 경비사태 발생시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물리적인 힘으로 대처하는 것이 특징임(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부대편성, 관리, 운영이 필요함)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	경비경찰은 지휘관의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으로 부대원의 재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휘관이 지는 경우가 많음
사회전반적 안녕 목적의 활동	경비경찰의 대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작용함(경비경찰의 임무는 국가목적적 치안의 수행임)

정답 ③

23 경비경찰의 조리상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하는 것이며, 적극적인 복리증진 등을 위해서 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경찰공공의 원칙은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사주소불간섭의 원칙, 민사상의 법률관계불간섭의 원칙의 3가지 요소가 성립된다.
- ③ 경찰권의 발동은 원칙적으로 경찰상의 장애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만 행하여지는 것이며, 경찰책임은 민·형사상의 책임에 있어서와 같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④ 경찰권의 행사는 반드시 그 활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한 경찰권의 행사가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해설 →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 ④ 경찰권의 행사는 반드시 그 활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요한다는 것은 조리상의 한계가 아니라 법규상의 한계를 말한다.

정답 ④

24 행사안전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사안전경비는 조직화된 군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 경계하는 활동이다.
- ② 군중정리의 원칙 중 군중들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알지 못함으로써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일정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지시의 철저 원칙이다.
- ③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공연법」 제11조에 의하면 공연장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 ① 행사안전경비는 조직화되지 않은 군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혼란 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로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경비활동이다.

- ② 군중정리의 원칙 중 일정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이동의 일정화 원칙이다.
- ③ 공연법 제1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1호
- ④ 공연장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정답 ③

25 선거경비 및 공직선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모두 선거일 06:00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갑호비상이 원칙이다.
- ② 개표소 경비관련 3선 개념에 의하면 제1선은 개표소 내부, 제2선은 울타리 내곽, 제3선은 울타리 외곽으로 구분한다.

- ③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하여 할 수 있다.
- ④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해설 →

- ①② 모두 옳은 설명이다.
- ③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공직선거법 제33조 제3항 제2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동법 제59조). 즉,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다.
- ④ 동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정답 ③

26 다중범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확신적 행동성 - 다중범죄를 발생시키는 주동자나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의 사고가 정의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므로 전투적인 경우가 많다.
- ② 조직적 연계성 - 다중범죄는 특정한 조직에 기반을 두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행동방침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태의 진상파악에 도움이 된다.
- ③ 부화뇌동적 파급성 - 다중범죄는 조직이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곳에서 시위사태가 발생하면 같은 상황이 전국적으로 파급되기 쉽다.
- ④ 비이성적 단순성 - 시위군중은 과격 단순하게 행동하며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다. 점거 농성할 때 투신이나 분신자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해설 →

-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 ④ 점거 농성할 때 투신이나 분신자살 등은 비이성적 단순성이 아니라 확신적 행동성을 말한다.

[핵심정리] 다중범죄의 특징

구 분	내 용
확신적 행동성	다중범죄의 참여자는 자신의 주장 등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회정의를 위하여 투쟁한다는 생각으로 투신이나 분신자살을 하는 등 과감하고 전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음
조직적 연계성	다중범죄는 특정한 조직에 기반을 두고 조직의 뜻대로 계획해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감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부화뇌동적 파급성	다중범죄의 발생은 군중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단 발생하면 부화뇌동으로 인하여 갑자기 확대될 수도 있음
비이성적 단순성	시위군중은 이성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함으로써 과격·단순·편협하여 타협이나 설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정답 ④

27 집회시위의 해산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진해산의 요청 → 종결선언의 요청 → 해산명령 → 직접해산의 순서로 진행한다.
- ② 자진해산 요청은 직접 집회주최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종결선언은 주최자에게 요청하되, 주최자 주관자 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 ④ 자진해산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 ① 종결선언의 요청 → 자진해산의 요청 → 해산명령 → 직접해산의 순서로 진행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②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호).

③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④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동시행령 제17조 제2호). 또한 자진해산 요청시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요청할 필요는 없고, 그 때 해산을 요청하는 언행 중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0.11.24. 2000도2172).

정답 ③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주거지역의 주간(해뜨기 후~해지기 전),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의 소음기준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75dB 이하 - 65dB 이하
- ② 70dB 이하 - 60dB 이하
- ③ 65dB 이하 - 60dB 이하
- ④ 65dB 이하 - 55dB 이하

해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

[핵심정리] 소음기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

시간대 대상지역	주간(해뜨기 후~해지기 전)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5 이하	65 이하

정답 ③

29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 ②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된 때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가'급에 해당한다.
- ③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된 때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나'급에 해당한다.
- ④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된 때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다'급에 해당한다.

- 해설** → ①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
- ② 옳은 설명이다.
- ③④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된 때 일부 지역의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나'급에 해당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다'급에 해당한다.

[핵심정리] 국가중요시설

구분	내용
가급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된 때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나급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된 때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다급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된 때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답 ②

30 「통합방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다.
- ② 을중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 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의미한다.
- ③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중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통합방위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8조 제2항
 ② “을중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7호).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
 ④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중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정답 ①

31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의 종류별 정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비비상 갑호 - 대규모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예견되는 경우
 ② 작전비상 을호 - 걱정이 발생하였거나 일부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경우
 ③ 정보비상 을호 - 간첩 또는 정보사범 색출을 위한 경계지역 내 검문검색 필요시
 ④ 수사비상 을호 - 사회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중대범죄 발생시

해설 → ①③④ 이들은 옳지 않고, ② 이는 옳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4조 제3항 [별표 1]).

[핵심정리] 비상근무의 종류별 정황(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4조 제3항 [별표 1])

구분	내용	
경비비상	갑호	1.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 2. 대규모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 3.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의 급증으로 가용경력을 100%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을호	1. 대규모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예견되는 경우 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가 증가하여 가용경력의 5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호	1.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의 혼란이 예견되는 경우 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가 증가하여 가용경력의 3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전비상	갑호	대규모 적정(敵情)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징후가 현저한 경우
	을호	걱정이 발생하였거나 일부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경우
	병호	정·첩보에 의해 적 침투에 대비한 고도의 경계강화가 필요한 경우
정보비상	갑호	간첩 또는 정보사범 색출을 위한 경계지역 내 검문검색 필요시
	을호	상기 상황에서 특정지역·요지에 대한 검문검색 필요시
수사비상	갑호	사회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중대범죄 발생시
	을호	중요범죄 사건발생시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pa.co.kr 에서 제공됩니다.

교통비상	갑호	농무, 풍수설해 및 화재로 극도의 교통혼란 및 사고발생시
	을호	상기 징후가 예상될 시

정답 ②

32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테러취약시설”이라 함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경찰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건축물 등, 공관지역, 미군 관련 시설 등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건축물 등을 말한다.
- ② 테러취약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이다.
- ③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내 국가중요시설 중 선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 ④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대테러 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은 반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 ①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② 동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③ 동규칙 제21조 제2항
 ④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대테러 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은 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동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정답 ④

33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원경찰은 경찰서장이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청원경찰은 배치신청 - 배치결정 - 임용승인신청 - 임용승인 - 임용 순서로 배치한다.
- ③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해설 →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청원경찰법 제5조 제1항).
 ② 동법 제4조 제1항·제2항,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③ 동법 시행령 제17조
 ④ 동법 제8조 제2항

정답 ①

34 경호의 대상 및 경호활동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직대통령(퇴임 후 10년 경과),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는 을호 경호대상이다.
- ② 왕족, 국제기구대표, 행정수반, 기타 장관급 이상 외빈은 외빈 A·B등급으로 경찰청장이 등급을 분류한다.
- ③ 행사성격에 의한 구분 중 정무 또는 사무상 필요에 의해 사전 통보나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행사 때 실시하는 경호를 “비공식” 경호라고 하며, 현장방문행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 ④ 활동시점 및 경호 방법에 의한 구분으로 선발경호, 수행경호가 있다.

해설 → ① 전직대통령(퇴임 후 10년 경과)과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을호 경호대상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는 갑호 경호대상이다.
 ② 왕족, 국제기구대표, 기타 장관급 이상 외빈은 경찰청장이 외빈 A·B등급으로 분류하지만, 행정수반은 경호처장이 국민 A~C등급으로 분류한다.
 ③ 행사성격에 의한 구분 중 정무 또는 사무상 필요에 의해 사전 통보나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행사 때 실시하는 경호를 “완전비공식” 경호라고 하며, 공식방문·운동·공연관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옳은 설명이다.

정답 ④

35 행사장 경호와 관련하여 제2선(경비구역)에서의 근무요령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 바리케이드 등 장애물 설치 | ㉡ 돌발사태 대비 예비대 운영 |
| ㉢ 구급차, 소방차 대기 | ㉣ 감시조 운영 |
| ㉤ 출입자 통제관리 | |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 ㉠㉡㉣ 3 항목이 제2선(경비구역)에서의 근무요령이다.

[핵심정리] 행사장 경호의 근무요령

구분	내용	
제1선 (안전구역 : 내부)	① 절대안전 확보구역 ② 근무요령 - 출입자 통제관리 - 비표 확인 및 출입자 감시	- MD 설치 운용
제2선 (경비구역 : 내곽)	① 주경비지역 ② 근무요령 - 바리케이드 등 장애물 설치 - 구급차, 소방차 대기	- 돌발사태 대비 예비대 운영

제3선 (경계구역 : 외곽)	① 조기경보지역 ② 근무요령 - 감시조 운영 - 도보 등 원거리 기동순찰조 운영 - 원거리 불심자 검문·차단
--------------------	---

정답 ①

36 경찰의 전문직업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클라이니히는 고전적 전문직의 특징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 윤리강령의 제정, 전문지식과 전문기술, 고등교육의 이수, 자율적 자기통제를 제시하였다.
- ② 관료제의 획일적 명령체계는 전문화를 저해한다.
- ③ 전문직업화의 윤리적 문제점 중 ‘소외’는 전문직이 되는데 장기간 교육과 많은 비용이 들어,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
- ④ 전문직업화의 윤리적 문제점 중 ‘부권주의’는 아버지가 자식의 문제를 모두 결정하듯이 전문가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

-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 ③ 전문직업화의 윤리적 문제점 중 ‘소외’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핵심정리] 전문직업화의 문제점

문제점	특 징
부권주의(父權主義) (paternalism)	아버지가 자식의 문제를 모두 결정하듯이 전문가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이로 인하여 치안서비스의 질이 저해된다).
사적 이익을 위한 이용 (exploitation)	전문인들은 그들의 지식과 기술로 상당한 사회적 힘을 소유하지만, 이러한 힘을 때로는 공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이용한다.
소 외 (alienation)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한다.
차 별 (discrimination)	전문직이 되는 데 장기간의 교육과 비용이 들어,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한다.

정답 ③

37 경찰부패의 원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체사회 가설’은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고 한다.
- ②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서면 등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으로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고 한다.

- ③ ‘구조원인 가설’은 부패의 관행이 경찰관들 사이에서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 ④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보다는 개인적 결함에 두고 있다.

해설 →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셔먼(Sherman) 등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으로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이어진다는 가설이다.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고 주장한 것은 썩은 사과 가설(rotten apple hypothesis)이다.

[핵심정리] 델라트르(Delattre)의 경찰부패의 이해

구분	내용
전체사회 가설 (society at large hypothesis)	윌슨(Wilson)이 내린 결론으로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이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명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 사회 전체를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구조원인 가설 (structural hypothesis)	니더호퍼(Nie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 등이 주장한 가설로 후임 경찰이 그들의 선임 경찰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이런 부패의 관행은 경찰 사이의 ‘침묵의 규범’ 등에 의해 보호되고 조장된다.
썩은 사과 가설 (rotten apple hypothesis)	① 시카고 범죄위원회(Chicago Crime Commission)가 내린 결론으로 경찰부패는 자질이 없는 경찰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 부패문제를 개인적 결함 문제로 본다. ② 사람을 부패로 이끄는 상황에서도 일부의 사람은 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상황과 자질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경찰조직에 들어옴으로써 부패에 가담하게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정답 ②

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금전, 유가증권 포함)은 동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②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단, 화환 조화를 함께 보낼 시경조사비와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는 동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③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대가성까지 있었다면 형법상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
- ④ 기존에 직급별로 차이가 있던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은 모두 4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pa.co.kr 에서 제공됩니다.

- 해설** → 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 제외)은 동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
- ② 동법 제8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호
- ③ 대가성이 있다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동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정답 ①

39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윤리표준과 구체적 위반 사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명과 재산의 안전 - 인질이 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교통법규의 준수를 우선함
- ② 공정한 접근 - 잘 아는 경찰관의 음주운전 무마
- ③ 역할한계와 팀워크 - 정의감이 투철한 형사가 사건을 취급하면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여 나쁜 사람에게 면박을 주는 경우
- ④ 공중의 신뢰 - 순찰근무 중 가난한 구역 순찰 누락 사례

- 해설** →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순찰근무 중 가난한 구역 순찰 누락”은 공정한 접근에 위반되는 사례이다.

[핵심정리]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5가지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Cohen and Feldberg)]

구분	내용
공정한 접근 (fair access)	①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기구로서 경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② 위배되는 사례 -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자신의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편들기 사례). - A지역과 B지역에 대한 순찰근무를 부여받은 경찰관이 B지역에 자신의 부모님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순찰시간의 대부분을 B지역에만 할애하였다(해태와 무시 사례).
공공의 신뢰 (public trust)	① 사회계약에 의하여 시민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였으므로 경찰은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② 위배되는 사례 - 경찰관이 순찰 중 강도가 칼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는 것을 보고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다. - 경찰관이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하였다.
생명과 재산의 안전 (safety and security)	① 경찰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법집행을 하여야 하고, 경솔하거나 과잉된 단속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② 위배되는 사례 - 경찰관이 10대 폭주족들을 발견하고 정지명령을 내렸으나, 폭주족들이 이를 무시하고 달아나자 그들을 무리하게 추격하는 과정에서 폭주족이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었다.

협동 (teamwork)	① 경찰은 행정부의 일부이고 사법정의에 있어 일부 분야만 대표하는 기관이므로, 경찰활동은 협동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다른 입법·사법·행정 기구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위배되는 사례 - 경찰관이 특진할 욕심으로 주요 탈옥범을 혼자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objectivity)	① 경찰관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 시민들에게 냉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위배되는 사례 - 도둑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이 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하면서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찰관이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지었다.

정답 ④

4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에는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나,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각종 증명서 발급 등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는 예외).
- ③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각종 증명서 발급 등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는 예외).
- ④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

-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제2항
- ② 동강령 제5조 제1항 제8호
- ③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동강령 제5조 제1항 제6호 다목).
- ④ 동강령 제15조 제2항

정답 ③